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2016년 11월

통상연구실 제현정 연구위원
이근화 연구원

CONTENTS

[요 약]	i
I.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01
1.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01
(1) 총괄	01
(2) 신통상정책에 미치는 외적·내적 요인	02
(3) 향후 통상정책 방향	05
2. 분야별 통상정책 전망	07
(1) 수입규제 (무역구제조치)	07
(2) 환율조작 감시	08
(3) 對중국 통상정책	09
(4) TPP	11
(5) 신통상규범 주도	11
II. 신행정부의 對한국 통상정책 전망	12
1. 총괄	12
2. 이슈별 對한국 통상정책 전망	13
(1)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13
(2) 한미 FTA와 이행이슈	14
(3) 무역적자 및 환율제재	15
(4) 한국의 TPP 참여	15
III. 한국에 대한 시사점	16

□ 보고서 내용 문의처

통상연구실 제 현 정 연구위원 (☎ 02-6000-5175, hjje76@kita.net)

트럼프 당선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짙어짐과 동시에 불확실성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대선공약이 그대로 정책으로 시행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조치를 취할 경우 각국의 보복을 야기하여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한미 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제재와 같은 공약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무역 관련 공약 중 어느 정도까지 입법화 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정부 출범 이후 경제 및 통상정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보호무역의 강도를 가늠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세계적인 통상마찰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요 교역국간 상호 협력이 요구되며, 우리 정부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에 대한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역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대미 통상외교 채널을 재정비하고, 미국내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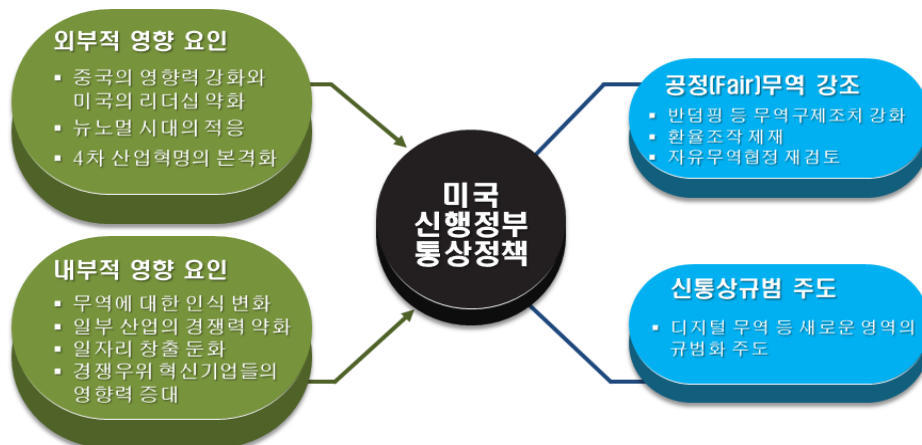
본 문

I.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

1.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1) 총괄

- 트럼프 당선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짙어짐과 동시에 '불확실성(uncertainty)'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며, 선거기간 동안의 공약을 실현시킬 경우 무역전쟁(trade war)과 같은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트럼프가 언급한 무역 관련 공약 중 어느 정도까지 입법화 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행정부 출범 이후 명확한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보호무역의 강도를 가늠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단기적으로는 공정(Fair)무역의 가치를 강조하여 무역구제조치가 강화·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NAFTA 등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음
- 그러나 미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요인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신산업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상규범 주도에도 힘쓸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세계경제의 뉴노멀, 중국과의 경쟁,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등 대외적 도전과 일자리 창출 둔화, 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경쟁우위 혁신기업들의 영향력 확대라는 대내적 상황을 꼽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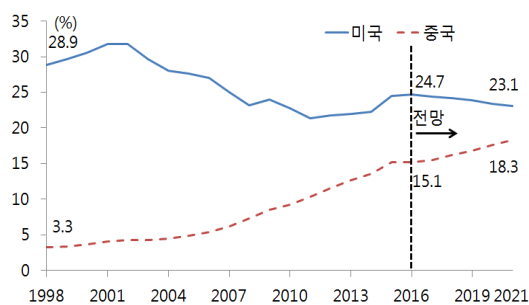
(2) 신통상정책에 미치는 외적·내적 요인

[외부적 영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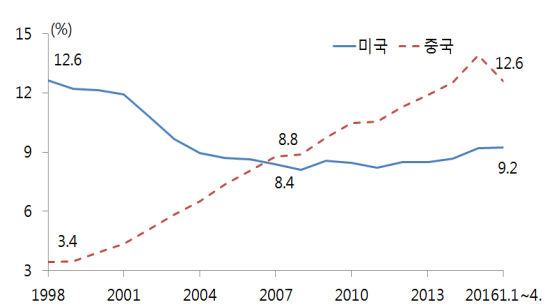
■ (중국의 영향력 강화 대응) 중국의 무역 및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한편, 양국간 경제적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은 통상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전에 직면

- 무역규모로는 2007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였으며, 전 세계 GDP 규모에서 차지하는 양국간 비중 격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나 양국간 상호의존 관계의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 장벽은 결국 수요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세계 GDP중 美·중의 비중 추이>



<세계 무역 중 美·중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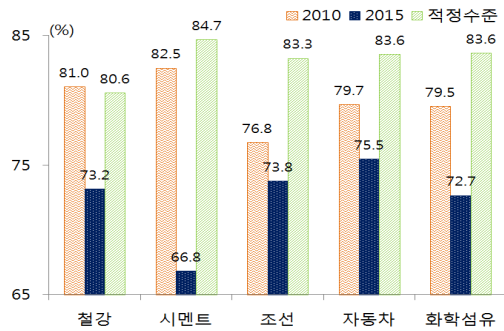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자료 : IMF DOTS (수출금액 기준)

■ (뉴노멀 시대에의 적응) 세계경제 뉴노멀과 중국의 중속성장 기조로 철강 등 일부 산업의 세계적 공급과잉과 전반적인 수요 증가세 둔화에 대응해나가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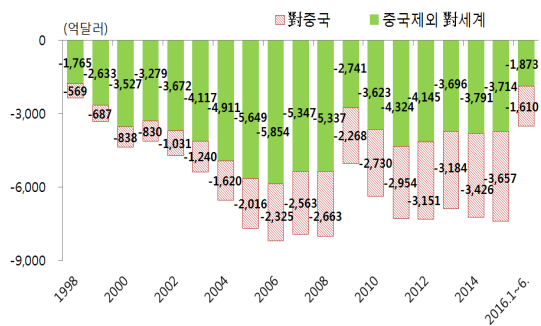
- 고성장 시기 중국의 투자 증가율, GDP 성장률은 각각 20%, 10%를 상회하며 과열양상을 보였으나, 2015년부터 6% 성장대에 진입
 - 중국의 고속 성장 시기에 과잉 투자되었던 철강, 시멘트, 조선 등의 산업에서 과잉 설비 및 재고 증가 문제가 대두
- 일부 산업의 중국내 과잉 생산분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특히 최대 수입 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 2015년 미국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3천 7백억 달러를 기록

<주요 과잉생산 산업의 설비가동률>



자료 : 중국인민은행, 对当前工业企业产能过剩情况的调查研究(2015)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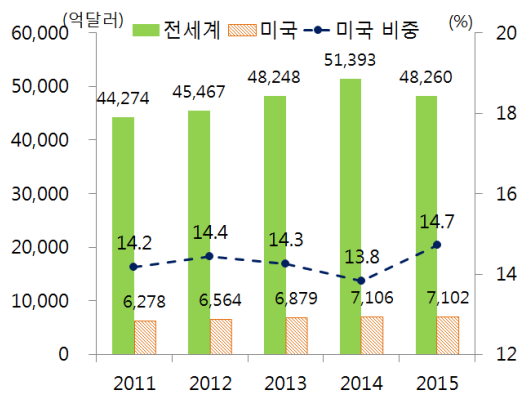
자료 : K-stat(한국무역협회)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 본격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관련 서비스 및 디지털 무역이 본격화됨에 따라 동 분야에서의 주도권 확보가 미국 경제 성장의 중요 과제로 대두

- 전 세계 서비스 수출은 2015년 기준 4.8조 달러이며, 미국은 7,100억 달러를 기록하여 14.7%를 차지함
- 미국의 ICT 기반 서비스(Potentially ICT-Enabled) 수출액은 약 4천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출의 50%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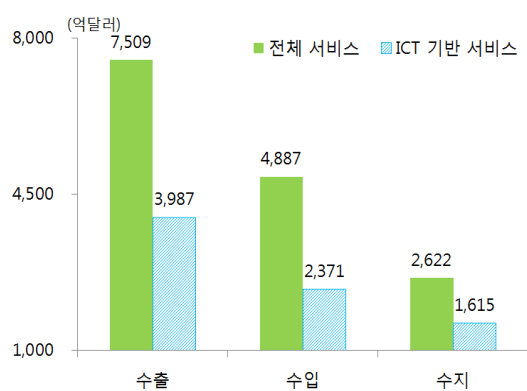
* ICT 기반 서비스(Potentially ICT-Enabled Service) :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실제로 거래된 서비스 뿐 아니라, 거래될 수 있는 서비스 항목들을 포함한 개념(보험, 금융, 지적재산, 전자 통신, 컴퓨터, 정보, 전문 컨설팅, 연구 등)

<세계 및 미국 서비스 수출 추이>



자료 : WTO

<미국의 ICT 기반 서비스 무역 현황>



주 :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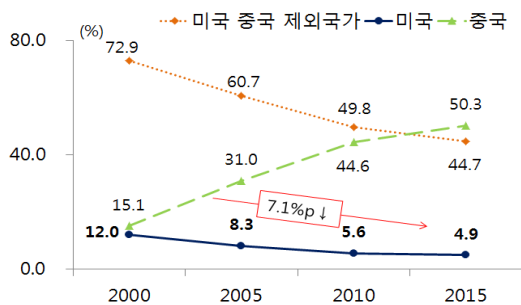
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내부적 영향 요인]

■ (美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일자리 창출 둔화)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공장 자동화 및 수요의 변화 등으로 고용창출이 둔화되면서 국내산업 보호 요구가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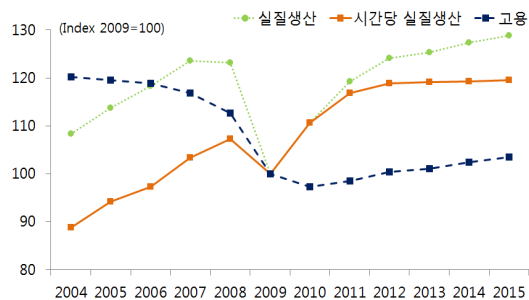
- 대표적으로 5대호 지역을 중심으로 번창했던 미국 철강 산업은 2000년대 초반에는 세계 조강생산의 12.0%를 차지했으나 2015년 4.9%로 크게 축소되면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주도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질생산은 위기 이전 수준을 초과하고 효율성 제고를 통해 시간당 실질생산도 상승하고 있으나 고용은 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미국의 조강생산 비중 추이>



자료 : World steel Association

<美 제조업 생산 · 고용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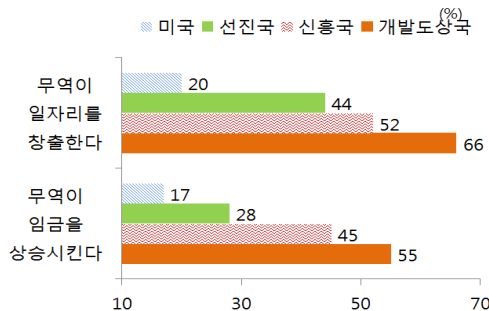


자료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무역에 대한 인식 변화) 무역에 따른 혜택의 불평등한 분배 문제가 누적되고 선거기간 정치적 공방이 지속되면서 무역과 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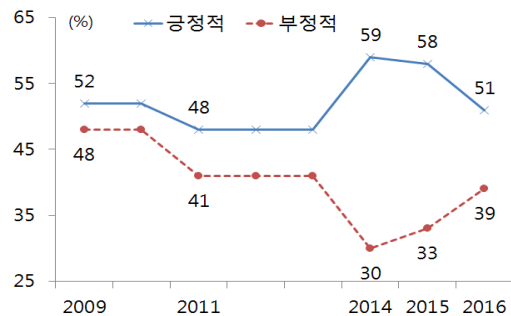
- 무역이 일자리 ·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20%정도에 불과하며,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아지는 추세임

<무역이 일자리 · 임금에 미치는 영향>



자료 : PEW Research Center Spring 2014 Global Attitude Survey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평가 추이>



자료 : PEW Research Center(2016.3.)

- (경쟁우위 혁신기업의 영향력 증대) 미국의 ICT 관련 혁신기업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별 무역장벽 해소와 신통상규범의 필요성을 강조

– 애플(Apple), 알파벳(Alphabet, 구글 지주회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미국의 혁신기업은 시장가치 기준 상위 10개 기업 중 6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Forbes 선정 시장가치 상위 10개 기업>

(단위 : 십억 달러)

기업명	시장가치	매출	수익	자산
Apple	586.0	233.3	53.7	293.3
Alphabet	500.1	77.2	17.0	149.7
Microsoft	407.0	86.6	10.2	181.9
ExxonMobil	363.3	236.8	16.2	336.8
Berkshire Hathaway	360.1	210.8	24.1	561.1
Facebook	314.8	17.9	3.7	49.4
Johnson & Johnson	312.6	70.2	15.4	133.4
Amazon.com	292.6	107.0	0.6	67.7
General Electric	285.6	122.4	1.7	492.7
Wells Fargo	256.0	91.4	22.7	256

자료 : Forbes Worlds Biggest Public Companies 2016(Global 2000)

(3) 향후 통상정책 방향

-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선거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실행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선거기간 동안 통상관련 트럼프가 언급한 7가지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출범 이후 정책 입안 및 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양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극단적 행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시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선거기간 동안 경제 및 통상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트럼프의 극단적인 보호주의 정책이 미국 및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 해왔음

트럼프가 제시한 7가지 계획

- ① TPP 협정에서 탈퇴
- ② 미국 노동자를 위해 싸울 강력한 무역 협상가 임명
- ③ 미 상무부의 무역협정 위반 감시 지시
미국법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협정 위반 종식
- ④ NAFTA 재협상, 불가능시 협정에서 탈퇴
- ⑤ 재무부로 하여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⑥ 중국의 불공정 행위시 국내 법원 및 WTO에서 제소
- ⑦ 중국의 불법행위 지속시 모든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 시행
[1974년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 301조(일방적 무역보복),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안보상 수입규제)]

■ (공정(fair) 무역 강조) 실행정부는 공정 무역(fair trade) 가치를 기반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무역협정 불이행에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미국 노동자들을 덤핑, 환율조작 등의 불공정한 행위로 부터 보호하고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주장
-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 및 공정무역(free and fair trade)의 가치와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the playing field)’을 강조해왔음

■ (신통상규범 주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쟁우위 산업들의 외국 시장 접근을 개선하고 신통상규범을 주도해나가는 무역협정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예상

- 트럼프는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협정을 체결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협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서비스, IT 및 첨단산업을 위한 글로벌 시장 확대와 관련 규범의 안정적 확립을 위한 무역협정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2. 분야별 통상정책 전망

(1) 수입규제 (무역구제조치)

■ 외국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업들의 제소 없이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할 경우 수입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작년에 이미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건수가 2001년 이후 최대 건수 (64건)를 기록하였으며, 금년에도 현재까지 49건의 조사가 개시됨¹⁾

<최근 미국의 국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건)>

	중국	한국	인도	브라질	터키	이탈리아	일본	전 세계
2015년	11	7	8	5	4	2	2	64
2016년	18	6	4	3	3	2	2	49

주 : 조사개시 건수는 동일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각각 1건으로 계산
자료 : 미국 상무부

- 사실상 수입규제조치의 주요 타겟은 중국산 수입품이지만 중국산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이나 조치는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하게 됨
- 미국 기업들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피제소 기업들의 조사 대응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미상무부의 피조사기업에 대한 정보 요구가 많아지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 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해지고 있어 특히 중소기업이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임
- 상무부가 ‘불리한 이용 가능한 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²⁾’ 규정을 보다 공격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덤핑마진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커짐
- 한국과 미국간 WTO 세탁기 분쟁의 패널 및 상소심 결과 미국은 반덤핑 마진 산정시 제로잉 관행을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1) 11월 현재까지 총 49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이루어졌으나, 2건은 조사 종료됨

2) 미국의 1930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의 Section 776을 개정하여 피조사 기업이 필요한 자료를 적절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당국인 상무부가 ‘불리한 이용 가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상무부의 그러한 결정을 법원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함

(2) 환율조작 감시

■ 무역 상대국의 환율조작과 관련하여 당분간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對중국 적자가 확대되고 위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환율 제재 관련 새로운 입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트럼프 당선자는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환율조작으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언급함
- 미국은 2015년에 외국의 불공정 환율 관행을 감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에 따라 재무부가 금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4월 보고서에서 발표한 감시대상국(Monitoring List)은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 5개국이었으며, 10월 보고서에서는 스위스가 추가됨³⁾
 - 환율조작에 대한 감시는 주로 중국, 일본, 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3개국은 이미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와 GDP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 흑자 수준이 높기 때문에 환율시장 개입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음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평가 지표>

	대미 무역수지 흑자 (15. 7~16. 6, 억달러) (1)	경상수지 흑자		시장개입	
		GDP 대비 비중, (15. 7~16. 6)(2)	3년간 GDP 비중 변화	GDP 대비 순외환매입 비중(3)	지속적인 순외환매입
중국	3,561	2.4%	0.0	-5.1%	No
독일	711	9.1%	2.3	-	No
일본	676	3.7%	2.6	0.0%	No
한국	302	7.9%	2.0	-1.8%	No
대만	136	14.8%	5.2	2.5%	Yes
스위스	129	10.0%	-1.6	9.1%	Yes

주 : (1) 무역수지흑자 기준 : 200억 달러, 미국 GDP의 약 0.1%

(2) 자국 GDP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흑자 기준 : 3% 이상일 경우 '물질적(material)'

(3) 지속적이고 일방적 개입의 기준 : 12개월 동안 GDP의 2%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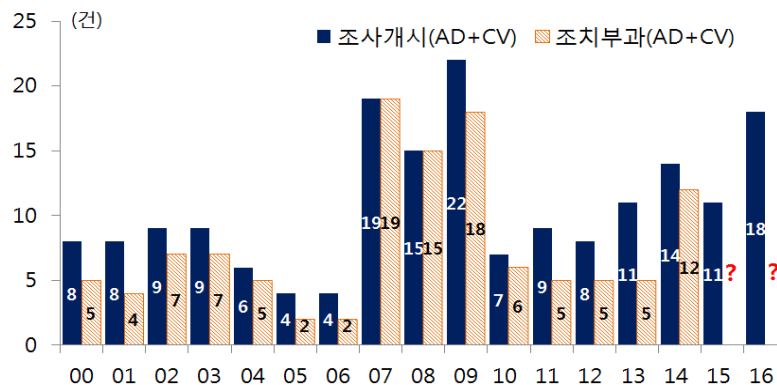
자료 : 미국 재무부,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S," 2016.10.14.

3) 재무부는 (1) 대미 무역수지 흑자, (2) 경상수지 흑자, (3) 외환시장 개입 세 가지 요건 중 2개 요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국가들을 감시대상으로 지정

(3) 對중국 통상정책

-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에 대한 극단적인 정책은 결국 자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집권 이후에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임
-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45% 관세 부과, WTO 제소 등 중국에 대한 강력한 통상 제재를 제안하였으나 실제 시행하게 될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져 양국 관계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중국을 겨냥한 무역구제조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수의 증가뿐 아니라 규제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의 대중국 수입규제 조사개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철강, 타이어,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18건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됨

<미국의 對중국 수입규제 조사개시 및 조치부과 추이>



자료 : 미국 상무부

-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Market Economy Status) 자동획득에 대한 중국, 미국, EU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는 반대의사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
- 오바마 행정부도 중국의 비시장경제지위 자동종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철강, 알루미늄, 섬유 등의 美 제조업체와 미국노동총연맹(AFL-CIO)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개진
- 중국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덤핑판정이 어려워지거나 덤핑마진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EU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음

[참고]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15조는 보조금 및 덤핑 결정에 있어서의 가격 비교(price comparability)와 관련하여 “중국 기업이 시장경제조건하에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반덤핑 절차에서 중국을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로 취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 절차에서 중국이 비시장경제로 취급될 경우,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격과 비교대상으로 중국의 국내가격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 정상가격(normal value)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덤핑마진이 높게 산정된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최대 수입규제 피제소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경제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해왔다. 중국은 비시장경제 방식을 허용한 의정서 규정이 가입 이후 15년이 되는 2016년 12월 11일에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과 EU는 동 조항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중국도 자체적으로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환율조작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중국의 경제흐름과 환율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치중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대중국 적자가 확대되고 위엔화 약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에는 환율조작을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 추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TPP

-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TPP를 ‘꿈쩍한 협상’이라고 하며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TPP 비준 여부는 불투명해짐
-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덕 기간에 TPP 비준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나 트럼프 당선과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 지속으로 비준 시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트럼프 당선자가 신행정부 출범 즉시 TPP 협정에서 탈퇴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며, 11개 회원국과의 관계와 협상 상대국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 약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예상됨

(5) 신통상규범 주도

-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당분간 지속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쟁우위 첨단산업의 해외 시장개척과 새로운 영역의 통상규범 주도를 위한 정책은 지속·강화될 것으로 전망
- 무역이 정치적 공방의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인 출신의 트럼프도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임
- 특히,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본격화로 서비스, IT 등 첨단산업 분야와 디지털 무역 영역에서 미국의 선도기업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의 자유화 및 규범화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음
 -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혁신 기업들은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의 이동(cross-border data flow)을 위해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데이터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각국의 장벽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
- 서비스 산업, 특히 디지털 전송 서비스(digitally-deliverable services) 산업이 미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지면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정책 및 규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

II. 실행정부의 對한국 통상정책 전망

1. 총괄

- 트럼프가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 한국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통상정책을 피할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트럼프의 행보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 트럼프가 선거기간 동안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를 언급한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한편, 현재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는 대부분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한국이 주요한 타겟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수입규제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들의 제소 자체를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간 관계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NAFTA와 한미 FTA를 포함하여 기존 무역협정의 재검토를 언급했으나 개정 협상 가능성, 그 시기와 개정 내용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미국 실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통상정책 예상>

01

공정무역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지속, 강화 예상

02

한미 FTA 이행 준수 강조, 개정 협상 제안 가능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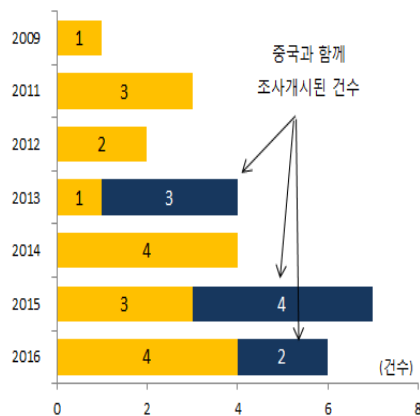
무역적자 및 환율조작 감시 지속

2. 이슈별 對한국 통상정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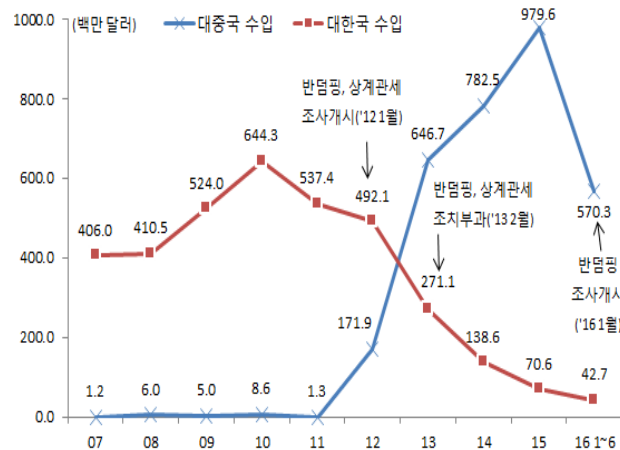
(1)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 최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중국산 수입제품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가격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과 중국에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음
-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1건(반덤핑 및 상계관세)이며, 이 중 9건이 중국과 함께 제소되었음
- 2012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고 2013년에 조치가 부과되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나 금년 초에 중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됨

<미국의 대한국 조사개시 건수>



<미국의 대한국 및 대중국 세탁기 수입>



주 : 조사개시 건수는 동일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각각 1건으로 계산
 자료 : 미국 상무부, 한국무역협회(K-stat)

- 중국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제로잉이나 AFA와 같이 피제조 기업들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높게 산정되는 원칙들이 새롭게 적용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됨

(2) 한미 FTA와 이행이슈

■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정문으로는 문제는 없으나 개정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임

- 한미 FTA 제24조 2항에 따라 협정의 개정(amendment)은 양 당사국이 서면으로 합의하고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여 서면통보를 교환한 후 합의하는 날에 발효됨

Article 24.2: Amendment

The Parties may agree, in writing, to amend this Agreement. An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the Parties exchange written notifications certifying that they have completed their respective applicable legal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n such date as the Parties may agree.

- 신행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측에서 필요한 개정 사항을 제안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FTA 협정의 이행을 강조하고 필요시 압력의 강도를 높일 수 있음

-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된 이후 원산지검증,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등 이행이슈가 제기되어 양국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왔음
- 그러나 이행의무에 대한 시각차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거나 신규 이행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법률시장 개방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3단계 개방을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한국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한·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주요 내용>

진행사항		내용
1단계	(2012.3.15.)	미국로펌의 한국지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 허용 외국법(미국법 및 일부 국제공법) 자문 허용
2단계	(2014.3.15.)	국내 로펌과의 사안별 업무 제휴 허용
3단계	(2017.3.15.)	국내로펌과 합작사업체 설립 및 동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

(3) 무역적자 및 환율제재

-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와 환율조작 제재는 중국이 타겟이지만 한국과의 무역수지 추이, 원/달러 환율 움직임, 정부의 환율정책을 주시할 것으로 예상
-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 보고서(4월, 10월)에서 한국은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재무부가 제시한 감시대상 3가지 요건 중 ①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과 ②GDP에서 차지하는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기준 등 2가지 요건에서 기준을 초과함
- 미국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을 감소시키고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 중장기적인 원화의 절상이 필요하다고 평가
- 미 재무부 10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과 바람직한 정책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4~12% 절하되어 있다는 내용의 IMF 보고서를 인용함

(4) 한국의 TPP 참여

- 트럼프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TPP 협정을 탈퇴하거나 적어도 미국의 TPP 비준이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TPP 협정 자체의 존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분간 논의 추이를 지켜보고 실제 미국이 TPP로부터 탈퇴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III. 한국에 대한 시사점

- 트럼프의 당선으로 향후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임
 - 그러나 트럼프가 언급한 무역 관련 공약 중 어느 정도까지 입법화 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근거 없는 예측과 예단으로 국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피해야 함
- 2017년 1월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3월 15일에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집권 초기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휩쓸려 한미 FTA가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국 모두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특히, 선거기간 동안 트럼프는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양국간 무역과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현지 생산 등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
- 신행정부의 행보 중 예측이 가능한 것은 공정(fair)무역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수입규제조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임
 - 주요 규제 대상은 중국이지만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수단과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게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조사 당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WTO 세탁기 분쟁 판정 이후 표적덤핑의 제로잉 관행을 시정해야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적 제도 도입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수입규제를 자제시키는데 있어 정부의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 유관기관 및 우리 기업 스스로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요구됨

- 미국 기업들의 수입규제 제소 자체를 억제하기 힘든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기업들은 사전 제소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시 자료 요구에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무역구제는 수입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이나 최근에는 미국 기업들이 수입물량이 적은 상황에서도 조기 제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국내 경쟁업체들의 움직임을 항시 주시할 필요가 있음

■ ICT,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통상규범을 주도하고자 하는 미국의 논리와 미국 기업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의 입장과 대응 논리를 준비할 필요

- 미국의 ICT 분야 선도 기업들은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국경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에 대한 장벽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양자 차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 장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복수국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서도 상당히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1980년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에 포함시켜 결국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이끌어낸 바 있음

[참고문헌]

○ 국내문헌

류예리, 중국 WTO 가입의정서의 효력종료에 관한 연구, 2016년 8월, 통상법률
윤우진 외,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2016년 11월, 산업연구원
이상현, 미 대선과 한미관계: 이슈와 전망, 2016년 8월, 세종연구소
이정미 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2016년 5월, KOTRA
제현정, 미국 대선후보 확정, 한미 통상관계의 향방은? Trade Brief Vol.15,
No.15. 2016년 6월, 국제무역연구원
제현정,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대응, Trade Focus Vol.15. No.26, 2016년
10월, 국제무역연구원
한재진 외, 2016년 양회와 중국 경제의 향방, 2016년 3월, 현대경제연구원

○ 외국문헌

Alexis N. Grimm, Trends in U.S. Trade in ICT Services and in
ICT-Enabled Services, May 2016, BEA
Bryan Riley, A Trade Policy that Puts Americans First, The Heritage
Foundation, April 2016
David A. Parker and Matthew P. Goodman, Toward a Mutually
Beneficial U.S.-China Economic Relationship, CSIS, September 2016
Department Of Commerce, Digital Economy and Cross Border Trade,
January 2014,
Hillary Clinton's Strategy to "Make it in America", October 2016
Inside U.S. Trade, U.S. To China : Non-Market Economy Status doesn't
Automatically End In December, July 2016
Inside U.S. Trade, TPP's Fate In Lame-Duck Uncertain As Congress
Leaves After Election, September 2016
Kevin G. Nealm, Trade Politics Aren't What You Think, CSIS,
September 2016
Marcus Noland et al., PIIE, Assessing Trade Agendas in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September 2016.

Pew Research Center, Faith and Skepticism about Trade, Foreign Investment, September 2014

Testimony of Robert D. Atkinson, “Expanding U.S. Digital Trade and Eliminating Barriers to Digital Exports,” July 2016, ITIF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April/October 2016.

2016 Democratic Party Platform, July 2016

중국인민은행, 对当前工业企业产能过剩情况的调查研究, 2015年 12月

○ 통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www.stat.kita.net

Forbes, www.forbes.com/global2000/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www.imf.org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www.bls.gov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www.bea.gov

USITC, www.usitc.gov.

World Steel Association, Steel Statistical Yearbook, www.worldsteel.org

WTO 서비스 무역 통계, www.wto.org.

미국 실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Trade Focus 2016년 40호

발행인 | 김인호

편집인 | 김극수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6년 11월 11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